학동 참사·경도 개발·부영주택 잔여부지 특혜 등 쟁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서 다뤄질 광주·전남 현안 뭐가 있나

'광주 학동 참사' 문제 등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 막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가지만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있어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정국 현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동 참사를 제외한 지역 현안은 대부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여야의 대선 주자 경선이 겹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대다수 일반 상 임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 정몽규 회장 국토위 출석 여부 관심 10월 15일 전남도·전남경찰청 국감 한빛원전 안전도 도마에 오를 듯

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여가위 국감은 $25\sim27$ 일 예정돼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오는 10월 15일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의 국감이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 는 학동참 사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5일부터 환경노동위원 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 다. 환노위에서는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인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위 국감에서도 정몽규 HDC현대산업개 발 회장을 불러 학동 참사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듣 겠다는 계획이어서 정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

국토위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일부 상임위에서 정 회장의 증인 출석 움직임이 있었지 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돼 국토위 국감장에 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 신청했다"면서 "정 회장 이외에도 유족, 변호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근 본적인 문제와 대책 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전남지역에서는 '한빛원전' 안전문제와 '미래에 셋 경도 개발' '부영 한전공대 잔여부지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된 사안이 국감장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이어지는 미래에셋 그룹의 경도 관광개발,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잔여지 대규모 아파트 건립 특혜 문제 등이 전남도 국감에서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는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의혹'이 국감장을 장식 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 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 대한 파고들 태세다.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 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 구하고 나섰다. 증인으로는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 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을 부 르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산자위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다.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김형호 기자 kroh@kwangju.co.kr



4·3 위령제단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민심 살피는 이낙연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부산 동래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전 대표는 이날 위드코로나 전환 촉구를 위한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반환점 돈 민주 경선…이재명 본선 직행 이번주말 사실상 판가름

김두관 '무효표 처리'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다음달 3일 '2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본선 직행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경선이 시작된 이래 광주·전남을 제외한 지역 순회경선에서 '과반 연승' 행진을 하며 파죽지세로 본선에 다가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딱 한 번 122표차로 승리를 내줬지만, 전북까지 합산한 호남 전체 결과에선 이 지사가 승리를 거머쥐면서 본선 직행은 더 탄력을 받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호남에서도 이 지사에게 밀리면서 결선행에서 더 멀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이에 따라 50만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다음달 3일 2차 슈퍼위크가 이 지사

의 본선 직행을 결정짓는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주자 간 표 차이가 12만표 가까이 나는 만큼, 이 전 대표가 2차 슈퍼위크에서 대역전을 하 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론 이 지사가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김두관 의원 사퇴에 따라 득표율 산정 논란이 재점화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앞서중도 하차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때와 마찬가지로김 의원의 득표(4411표)도 모두 무효 처리하기로했다. 이 경우 누적 득표율은 이 지사 53.0%에서53.3%, 이 전 대표 34.4%에서 34.7%로 각각 미세조정돼 별 차이가 없지만, 호남(광주·전남 및 전북합산) 득표율의 경우 이 지사가 49.7%에서 50.1%로 조정돼 과반 미달이었던 결과가 과반 달성으로 바뀐다

즉 이 지사가 광주·전남에서 승리를 내줬음에도, 김두관 의원의 사퇴에 따라 호남 전체에선 과반 연 승을 이어간 셈이 되면서 이 지사의 본선행 가능성 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남은 주자들의 사퇴 가능성도 주목된다. 특히 3위인 추미에 전법무부장관(6만8362표)의 사퇴를 가정하면이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9.7%로 훌쩍 뛰며이 전대표(38.8%)와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진다.

따라서 만약, 현재 4명의 대선 경선 주자 중 한 명이라도 더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앞으로 수도권 순회 경선(10월9, 10일)과 3차 슈퍼위크는 맥 빠진 경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각 주자에 완주를 당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국 문제는 후보가 사퇴하면서 발생한 거니 후보들이 추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완주하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30.0%·윤석열 27.1%·홍준표16.6%

KSOI 조사…이낙연 12.5%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누르고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 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 가 30.0%, 윤 전 총장이 27.1%를 각각 기록하면 서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 지사는 전주보다 6.4%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1.7%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8월 4주차 조사부터 1위를 유지해오던 이 지사는 지난주 대장동 의혹 등의 여파로 윤 전 총 장에게 4주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가 다시 탈환 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총공세가 이 어지는 가운데 지지층 결집 등이 나타나면서 이 지사 상승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전주보다 1.2% 포인트 상승한 16.6%,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2%포인트 내린 12.5%를 기록하며 각각 3, 4 위에 올랐다.

범 진보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33.0%), 이 전 대표(22.5%), 민주당 박용진의원(4.3%)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주에는 추미에 전 법무장관이 박의원을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선 밀렸다.

범 보수권의 경우 윤 전 총장(29.7%)과 홍 의 원(29.5%)이 초접전을 벌인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10.1%)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